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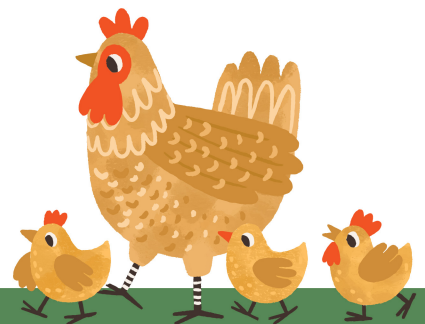
국회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2. 8. 30 (화) 오후 3:00



온라인 생중계
zoom (ID: 883 1311 9542)



주최 | 동물복지국회포럼 · 윤미향 국회의원 · 동물자유연대

토론회 순서

■ 인사

15:00 - 15:10	개회사/환영사 • 박홍근 국회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 이현승 국회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 한준호 국회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연구책임의원) • 윤미향 국회의원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

■ 주제 발표

15:10 - 15:30	발제 1. 산란계복지에 대한 농장주의 의향 설문조사 결과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 소장)
15:30 - 15:50	발제 2. The process from Battery-cages to Cage-free systems in Germany (Dr. Nicola Hirsch, Tiergesundheitsdienst e.V.)

■ 패널 토론 (좌장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15:50 - 16:00	토론 1. 축산법 시행령 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산란계농장의 현실과 입장 (최종건 A형 농가 농장주)
16:00 - 16:10	토론 2. 동물복지사육에 대한 업계의 입장 (안두영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16:10 - 16:20	토론 3. 산란계 동물복지축산 현황과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국종인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회장)
16:20 - 16:30	토론 4.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 적용 (이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16:30 - 16:40	토론 5.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최일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수의사무관)
16:40 - 17:00	종합토론 / 자유토론
17:00	정리/폐식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입니다.



동물도 지각력 있는 존재이고, 본성에 따른 욕구가 있습니다.

자연적 상태에서 산란계는 모래 목욕, 햇대 오르기, 날개짓, 깃털 정리와 같은 여러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A4 한 장 면적도 되지 않는 사육 공간 안에서는 산란계의 모든 행동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배터리 케이지(밀집 사육 우리) 속 산란계는 일생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옆 닭을 공격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정상 수명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관련 문제의식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동물을 과도한 밀집 상태에서 키우는 것’을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습니다.(한국리서치, 2022) 달걀의 사육환경을 표기하는 ‘달걀 난각제’가 시행된 2018년부터는 ‘일리(난각 번호 1:2) 있는 달걀 캠페인’ 등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동물복지축산물을 이용하겠다는 수요층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수준에 비해 동물복지 농가 전환은 갈길이 멀니다.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5년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기존 농가들의 생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란계의 고통 해소와 농가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과 그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산란계 케이지 사육 금지 과정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란계 농가의 동물복지축산 전

환 의향 및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실적 제약 요소를 확인하고,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토론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동물복지 산란계 전환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금지했습니다. 독일은 2025년까지 닭의 케이지 사육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도 내각부 및 여러 정부 부처 구내 식당에서 케이지 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는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8월 30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현승입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밀식 사육으로 인한 산란계의 고통을 경감하고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을 우리 포럼 차원에서 두 번째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농가에서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대다수 농가에서는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동물복지축산 전환 과정에 존재하는 제약 요소를 미리 확인하여 동물복지축산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 개최 취지입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에서 전국 산란계 농장 업주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자료도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님과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추진위원회 안두영 위원장님, 최종건 농장주님,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국중인 회장님, 농림축산식품부 이주원 사무관님,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일수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국회에서 법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현승

[개 회 사]

반갑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에 의원입니다.

처서가 지나니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커진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시고 많은 부분에서 애써주셨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그리고 동물자유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위해 많은 전문가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우희종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해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반려인구 천오백만 시대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제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농장동물 등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동물복지축산물을 구매하려는 가치소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산란계 사육두수는 약 7,270만 마리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의 사육두수는 232만 마리로 전체 사육두수 대비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란계의 최소사육기준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닭이 날갯짓을 하려면 0.198㎡의 공간이 필요한 만큼 닭의 원척적인 습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까지 최소사육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존립 불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실사육에 따른 산란계 등 농장동물의 고통을 해소하고, 소규모 농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신속한 전환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피고, 나아가 동물복지축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8월 30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개 회 사]

안녕하세요.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복지뿐 아니라 농장동물의 복지까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늘 고심하시는 박홍근, 한정애, 이현승 의원님을 비롯한 동물복지포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윤미향 의원님과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동물의 행복이 곧 인간의 행복입니다.

동물을 과도한 밀집 상태에서 키우는 것 역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늘면서, 동물복지 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2018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의 사육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육면적 확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밀식 사육보다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초기 인프라 역시 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동물복지 축산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모든 관계자가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산란계 면적확대 방안과 그에 따른 농가 지원책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국회와 농장주, 동물복지단체, 정부 부처가 함께하는 만큼,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을 위한 여러 정책과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해원 소장님과 Nicola Hirsch 교수님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우희종 교수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동물복지포럼 연구책임위원으로서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8월 30일

동물복지국회포럼 연구책임의원 한준호

[환 영 사]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자유연대, 함께하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동물의 목소리를 대신해 사람의 목소리로 동물복지를 말하는 자리에 저 또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첫 번째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계의 현실은 마리당 0.05㎡ 케이지 사육환경에서 평생 고통 견디는 것입니다. 땅을 쪼으며 자유롭게 먹이 활동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습성을 가진 닭에게 케이지는 너무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케이지 사육환경의 문제점을 인지하였으며, 케이지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익 추구에 목적이 있는 대기업이 케이지프리를 선언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의 이해원 소장님의 <산란계복지에 대한 농장주의 의향 설문조사 결과> 발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의 동물복지축산 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9.7%가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고, 27.2%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전환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40%가 향후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농장주의 인식개선과 동물복지 농장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 라도 질 좋고 윤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동물 복지 축산물을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동물복지인증 홍보 활동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그리고 농장주에게 축사 개조 비용과 케이지 교체 등의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값싼 제품을 공급하듯 축산물도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 발전을 해 왔지만 이제는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해야합니다.

오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농해수위 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0일

국회의원 윤미향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어느덧 또 한계절이 지나고 다시 가을의 문턱에서 들어섰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 불리는 만큼 매우 분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쌓여 있는 일들을 뒤로 하고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소속 의원님들, 윤미향 의원님, 발제 및 토론자분들, 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동물운동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22년전과 오늘날 우리사회의 동물에 대한 시선과 운동의 풍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선언적 조항으로만 만들어져 방치되어 있던 동물보호법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거치며 부족하나마 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는가 하면,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시동물들의 삶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제돌이가 고향인 바다로 돌아간 이래 총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방류되었고, 동물원 등의 전시시설이 허가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동물별 특성에 맞는 사육기준 등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장동물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집니다. 동물복지인증제도가 도입된지 10여년이 흘렀지만 동물복지 농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도적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명제가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농장동물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며 그 열매도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2017년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을 겪으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인간의 건강,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산란계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일환으로 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에서 0.075㎡로 늘리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건 동물복지 개선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모래목욕이나 깃털 다듬기 등 생태적 습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약간의 사육면적이 확대만으로 산란계 복지가 크게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존 농가 중 시설이 노후화된 이른바 'A형 케이지' 농가에서는 사육면적을 확대하면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낮아져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기존농가에 대한 시행령 적용을 앞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산란계들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시키면서도 관련된 이들의 피해도 줄일지 고민하고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의 국내외 동물복지 전문가, 관련업계, 정부와 함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동물복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 방향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변화에는 언제나 그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고 필연적으로 고통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모으고 모은다면, 어느 영화의 대사와 같이 우리는 늘 그랬듯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각 가정에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 희 경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목 차

발 제

산란계복지에 대한 농장주의 의향 설문조사 결과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 소장

The process from Battery-cages to Cage-free systems in Germany
Dr. Nicola Hirsch, Tiergesundheitsdienst e.V.

토 론

01. 동물복지사육에 대한 업계의 입장
안두영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02. 축산법 시행령 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산란계농장의 현실과 입장
최종건 A형 농가 농장주

03. 산란계 동물복지축산 현황과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국중인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회장

04.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 적용
이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05.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최일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수의사무관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발제 01.

산란계복지에 대한 농장주의 의향 설문조사 결과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 소장



2022. 08. 30

산란계복지에 대한 농장주 의향 설문조사 결과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 소장



CONTENTS

01. 설문조사 방법

02. 응답자 특성

03. 설문조사 응답 분석

- 1) 농장 현황
-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 3) 동물복지농장 관련 전망

04. A형 농장주 대상 직접 인터뷰

05. 소결

설문조사 방법



- 배터리케이지 사용 산란계 업주 대상,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및 **필요한 지원** 내용 조사
- 전국 약 800여명의 산란계 업주 중 **103명(12.9%)**의 응답을 직접 대면 혹은 우편으로 수거, 코딩
- 설문조사 완료 후 **A형 농장주**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농장주 **7명**과 인터뷰
- 설문조사 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1월(4개월)(※ Openphilanthropy로부터 편당)

응답자 특성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103	100
성별	남성	91	88.3
	여성	10	9.7
	미응답	2	1.9
연령	20대	1	1.0
	30대	6	5.8
	40대	24	23.3
	50대	37	35.9
	60대	24	23.3
	70대 이상	11	10.7

* 표에 기록된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하 모든 표에도 동일 적용함)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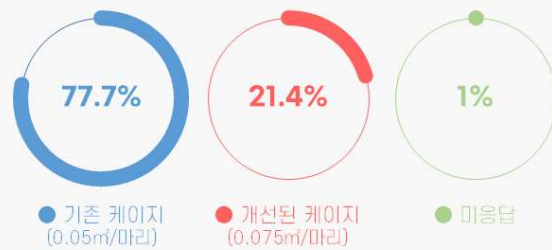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 분석] 1) 농장현황

구분	응답자		통계청 자료	
	N	비율(%)	N	비율(%)
전체	103	100	946	100
경기도	27	26.2	210	22.2
강원도	0	0.0	62	6.6
충청북도	9	8.7	79	8.4
충청남도	11	10.7	123	13.0
경상북도	0	0.0	162	17.1
경상남도	11	10.7	87	9.2
전라북도	13	12.6	73	7.7
전라남도	10	9.7	80	8.5
제주특별자치도	8	7.8	27	2.9
대구광역시	0	0.0	2	0.2
인천광역시	4	3.9	10	1.1
광주광역시	0	0.0	3	0.3
울산광역시	0	0.0	8	0.8
세종특별자치시	10	9.7	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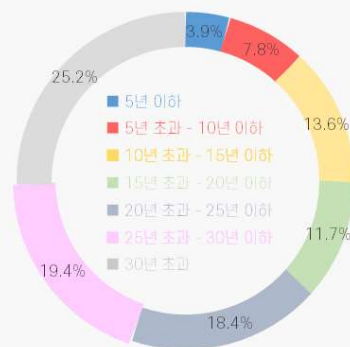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 분석] 1) 농장현황

사육환경	응답자수	비율
기존 케이지 (0.05㎡/마리)	80	77.7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22	21.4
미응답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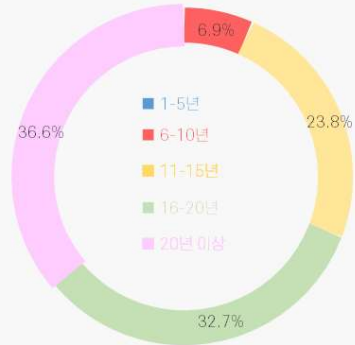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 분석] 1) 농장현황

운영 기간	응답자수	비율(%)
5년 이하	4	3.9
5년 초과 ~ 10년 이하	8	7.8
10년 초과 ~ 15년 이하	14	13.6
15년 초과 ~ 20년 이하	12	11.7
20년 초과 ~ 25년 이하	19	18.4
25년 초과 ~ 30년 이하	20	19.4
30년 초과	26	25.2



[설문조사 응답 분석] 1) 농장현황

케이지 교체주기	응답자수	비율(%)
1-5년	0	0.0
6-10년	7	6.9
11-15년	24	23.8
16-20년	33	32.7
20년 이상	37	36.6
미응답	3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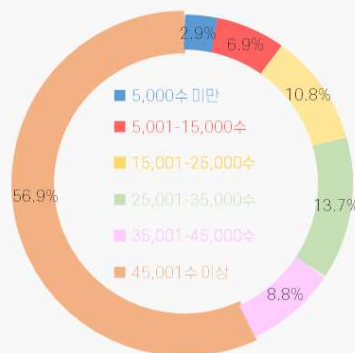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 분석] 1) 농장현황

케이지 설치 시기	응답자수	비율(%)
5년 이내	25	21.9
6-10년 전	29	25.4
11-15년 전	28	24.6
16-20년	16	14.0
21년 이전	16	14.0
미응답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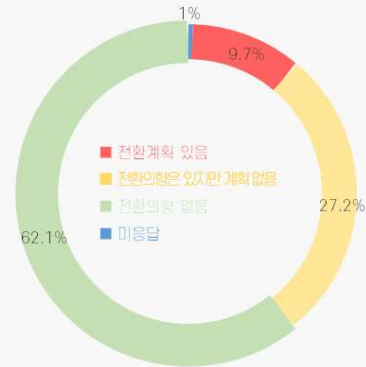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 분석] 1) 농장현황

입식 두수	응답자수	비율(%)
5,000수 미만	3	2.9
5,001~15,000수	7	6.9
15,001~25,000수	11	10.8
25,001~35,000수	14	13.7
35,001~45,000수	9	8.8
45,001수 넘음	58	56.9
미응답	1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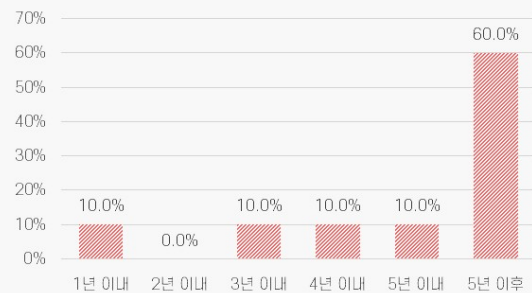
조사항목	응답자수	비율(%)
전체	103	100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	10	9.7
동물복지 농장 전환 의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28	27.2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다	64	62.1
미응답	1	1.0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2-1) 동물복지농장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

전환예정시기	응답자수	비율
1년 이내	1	10.0
2년 이내	0	0.0
3년 이내	1	10.0
4년 이내	1	10.0
5년 이내	1	10.0
5년 이후	6	60.0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2-1) 동물복지농장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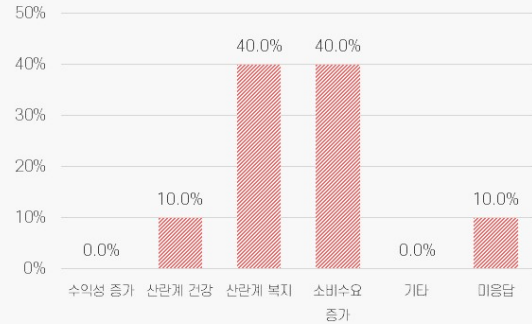
전환 형태	응답자수	비율
실내평사사육	7	70.0
방사사육	0	0.0
복지형 개방 케이지 (Aviary 케이지)	3	30.0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2-1) 동물복지농장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

전환이유	응답자수	비율
수익성의 증가를 예상해서	0	0.0
산란계의 건강을 위해서	1	10.0
산란계의 복지를 위해서	4	40.0
항후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해서	4	40.0
기타	0	0.0
미응답	1	10.0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2-1) 동물복지농장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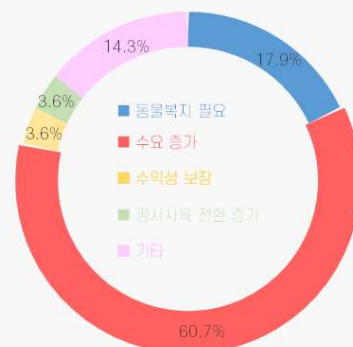
예상되는 어려움	응답자수	비율
축사 개조에 드는 비용	5	50.0
시설 유지 및 보수	0	0.0
산란계 관리	1	10.0
방란의 문제	4	40.0
기타	0	0.0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2-2) 동물복지농장 전환 계획은 없지만 전환 의향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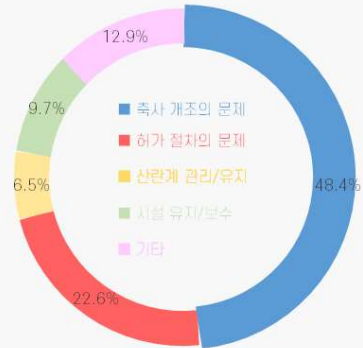
의향의 배경	응답자수	비율
동물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5	17.9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해서	17	60.7
수익성이 보장될 것 같아서	1	3.6
평사사육의 전환이 증가할 것 같아서	1	3.6
기타	4	14.3
미응답	1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2-2) 동물복지농장 전환 계획은 없지만 전환 의향은 있는 경우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	응답자수	비율
축사 개조의 문제	15	48.4
허가받을 때 절차의 문제	7	22.6
산란계 관리 및 유지의 문제	2	6.5
시설 유지 및 보수 문제	3	9.7
기타	4	12.9
미응답	0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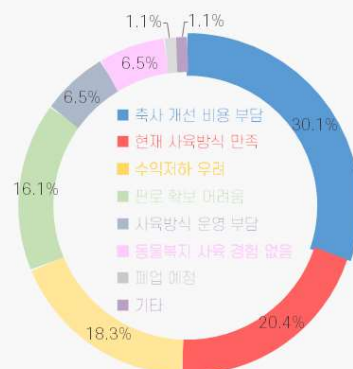
2-2) 동물복지농장 전환 계획은 없지만 전환 의향은 있는 경우

전환에 필요한 도움 혹은 지원	선택 비율(%)		
	1순위	2순위	3순위
동물복지 사육에 필요한 초기 시설 비용 (예: 난상, 햇대 등)	44.4	3.8	3.8
보조비 한도 상한 설정	3.7	30.8	11.5
직불제 실시	7.4	11.5	0.0
세제혜택	14.8	11.5	7.7
평사사육 운영과 관련된 교육	0.0	3.8	3.8
전환 과정에 있어 행정편의 제공	3.7	26.9	19.2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25.9	11.5	53.8
기타	0.0	0.0	0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2-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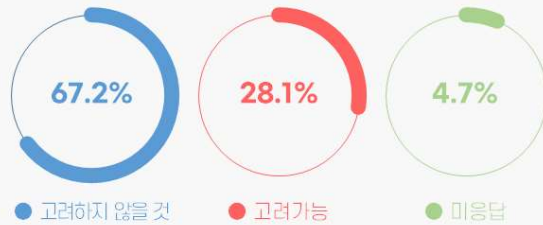
전환 의향이 없는 이유	응답자수	비율
현재 사육방식에 만족해서	19	20.4
축사를 개선하는 비용이 부담돼서	28	30.1
동물복지 사육방식의 운영이 부담돼서	6	6.5
동물복지 사육방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6	6.5
폐업을 예정하고 있어서	1	1.1
판로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15	16.1
수익 저하가 우려되어서	17	18.3
기타	1	1.1
미응답	1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2-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이 없는 경우

향후 전환 고려 가능성	응답자수	비율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43	67.2
고려할 수 있다	18	28.1
미응답	3	4.7



[설문조사 응답 분석] 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 및 촉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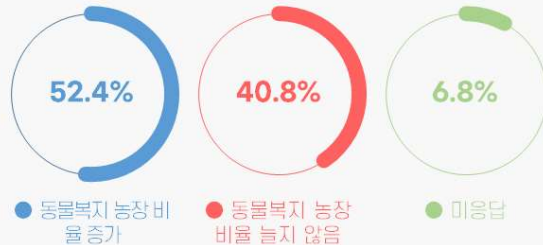
2-2) 동물복지농장 전환 의향이 없는 경우

추후 동물복지 전환 고려를 위한 지원 내용	선택 비율(%)		
	1순위	2순위	3순위
동물복지 사육에 필요한 초기 시설 비용 (예: 난상, 햇대 등)	38.8	21.6	16.2
보조비 한도 상한 설정	22.5	24.3	10.8
직불제 실시	16.3	18.9	16.2
세제혜택	0.0	5.4	13.5
평사사육 운영과 관련된 교육	0.0	5.4	0.0
전환 과정에 있어 행정편의 제공	1.3	16.2	13.5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16.3	8.1	27.0
기타	5.0	0.0	2.7

* 추후 어떠한 점이 충족된다면 동물복지 전환을 고려할지에 대한 응답 중 순위 미기재시 모두 1순위로 처리, 1순위 응답 총계가 전체 수를 초과

[설문조사 응답 분석] 3) 동물복지농장 관련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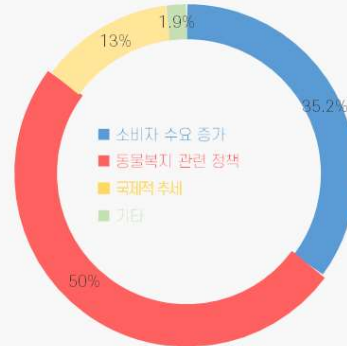
동물복지 농장 관련 전망	응답자수	비율
동물복지 농장 비율 증가	54	52.4
동물복지 농장 비율 늘지 않음	42	40.8
미응답	7	6.8



[설문조사 응답 분석] 3) 동물복지농장 관련전망

3-1) 동물복지농장이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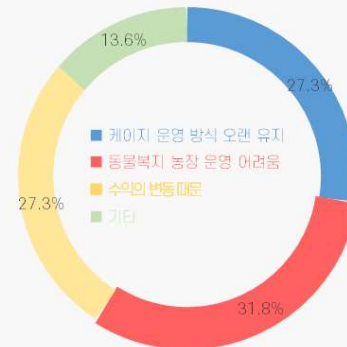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54	100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해서	19	35.2
동물복지 관련 정책으로 인하여	27	50.0
국제적인 추세에 의하여	7	13.0
기타	1	1.9



[설문조사 응답 분석] 3) 동물복지농장 관련전망

3-2) 동물복지농장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조사항목	응답자	
	N	비율(%)
전체	42	100
케이지의 운영방식을 오랜 기간 유지해왔기 때문에	12	27.3
동물복지 농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14	31.8
수익의 변동 때문에	12	27.3
기타	6	13.6
미응답	2	



* 동물복지농장이 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면 조사의 특성 상 복수응답으로 전체 응답 수 상, 전체 응답 수에서 미응답을 제외한 값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

A형 농장주 대상 직접 인터뷰

■ 참석자/진행방법

- ✓ A형 농가(3만수 1개소, 4만수 3개소, 6만수 2개소, 7만수 1개소) 농장주 7명
- ✓ 각자 자유발언

■ 주요내용

- ✓ 정부와 양계협회가 전국 A형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나 2025년에 실행될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0.05㎡ → 0.075㎡)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는 점에 문제 제기
- ✓ 0.075㎡/마리로 사육면적 변경시 현 A형 농장 산란계 수는 50%~75% 감소 예상되며, 농장 운영 불가
- ✓ A형 농장에서 직립식 현대 축사로 개사는 대부분 건물구조상 불가하며, 비용 역시 농장주가 감당 불가한 수준
- ✓ 참여 농장주의 대부분은 정책시행에 대비할 여력이 없으며, 시행시기쯤 유예기한 연장, 정책 폐기, 사료값 지원 등의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

소결

- 동물복지농장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농장주들의 동물복지 중요성, 소비자의 수요 증가 추세 인식은 고무적이나, 이들도 동물복지농장의 수익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 우려를 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축사 개조에 따른 전환초기 시설비용은 동물복지농장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꼽힘. 동물복지농장 전환 계획은 없지만 의향은 있는 농장주들과 전환 의향이 없는 농장주들이 동물복지 전환 혹은 전환 고려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 '초기 시설 비용 지원'을 꼽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 대두
- 현재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의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36.9%이지만 초기 시설 비용 지원 및 수익성 향상 등 제반조건 형성시 '향후 전환 고려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 17.5%를 더할 경우 과반을 넘는 54.4%에 달함
-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산란계 농가들의 동물복지농장 전환 잠재력은 확인. 따라서 관련 정책 마련 및 예산 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됨

Thank you!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발제 02.

The process from Battery-cages to Cage-free systems in Germany

Dr. Nicola Hirsch, Tiergesundheitsdienst e.V.



The process from Battery-cages to Cage-free systems in Germany

Dr. Nicola Hirsch, Tiergesundheitsdienst e.V.

Every laying hen has the following basic needs: feed, water, light, air, rest, space and health.

Creating an optimal environment for laying hens includes not only fulfilling the basic needs but also their behavioral needs: Pecking, scratching, perching, dustbathing and a laying nest.¹ These needs can not be fulfilled in battery cage systems.

For this reason Directive 1999/74/EC classified the welfare conditions of hens kept in current battery cages as inadequate. Simultaneously,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laid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laying hens and prohibited battery cages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2. Directive 1999/74/EC did still allow the rearing of laying hens in cages, conditional upon the cages being enriched with:

- a nest,
- litter - such that pecking and scratching is possible,
- perches - allowing at least 15cm per hen and
- suitable claw-shortening devices.

Due to high ethical consumer standards, Germany determined Directive 1999/74/EC to be insufficient. Battery cages were already forbidden in 2007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enriched cages (Picture 1) were far more detailed. Key points, included in the German Animal Welfare Livestock Husbandry Ordinance (2006), were:

- Minimum size of the cage: 2500 cm² (EU: 2000cm²)
- Space per hen: dependent on the weight of the hen: 800-900 cm² (EU: 750cm²)
- Minimum specific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of the nest and litter area (each: 900 cm² for up to 10 hens, when group size >30 hens: 90cm²/hen ex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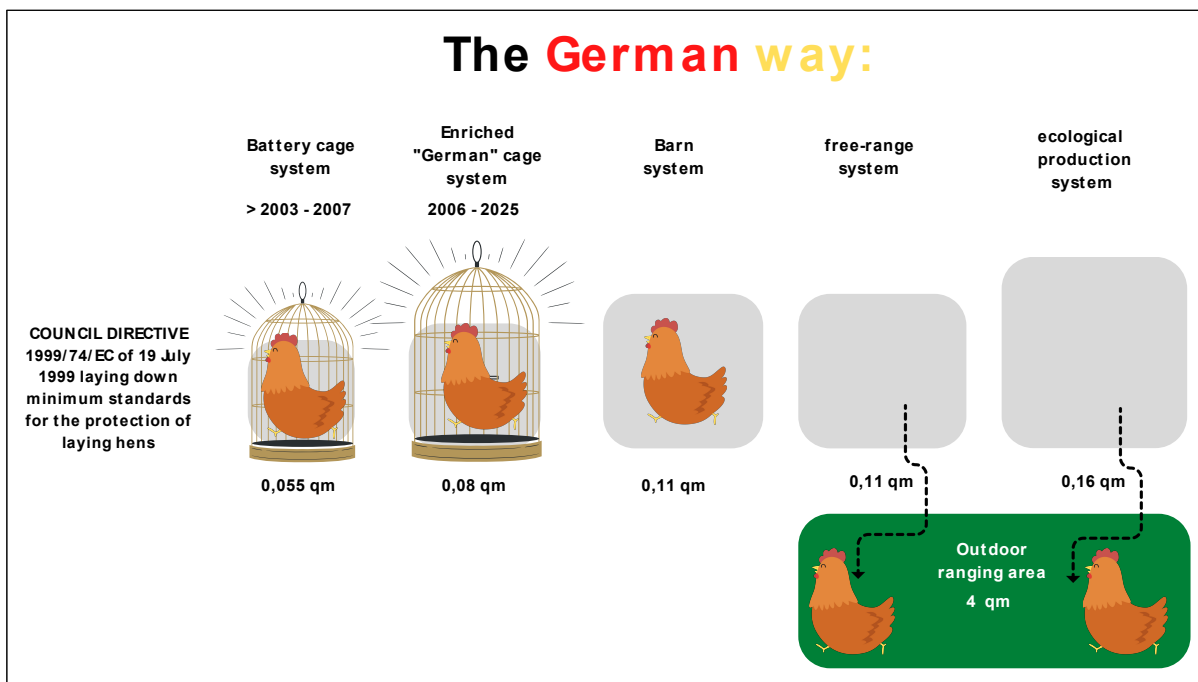
Due to a formal mistake in implementing the keeping of laying hens in enriched cages in the German Animal Welfare-Farm Animal Husbandry Ordinance, the enriched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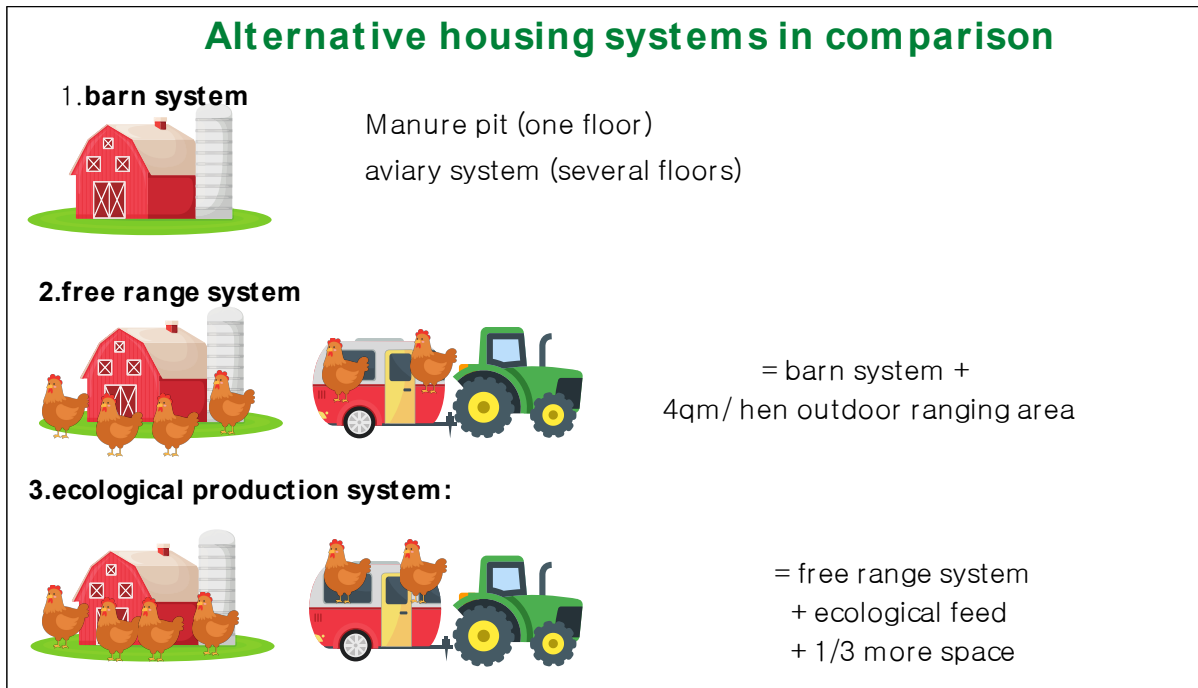
cages for laying hens were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in 2010 and forbidden from 2025 (Picture 3).



Picture 1 and 2: The "German" enriched cage system in comparison with an aviary. Used with permission from BigDutchman® .



Picture 3: The German Way: Process from battery cages to cage-free systems



Picture 4: Alternative housing systems in comparison

When asking German farmers how they experienced the process from battery cages to cage free systems, they express high displeasure. It is not that they did not approve the change, but rather that they are dissatisfied with how the change was transformed. They felt abandoned to deal with an immense number of challe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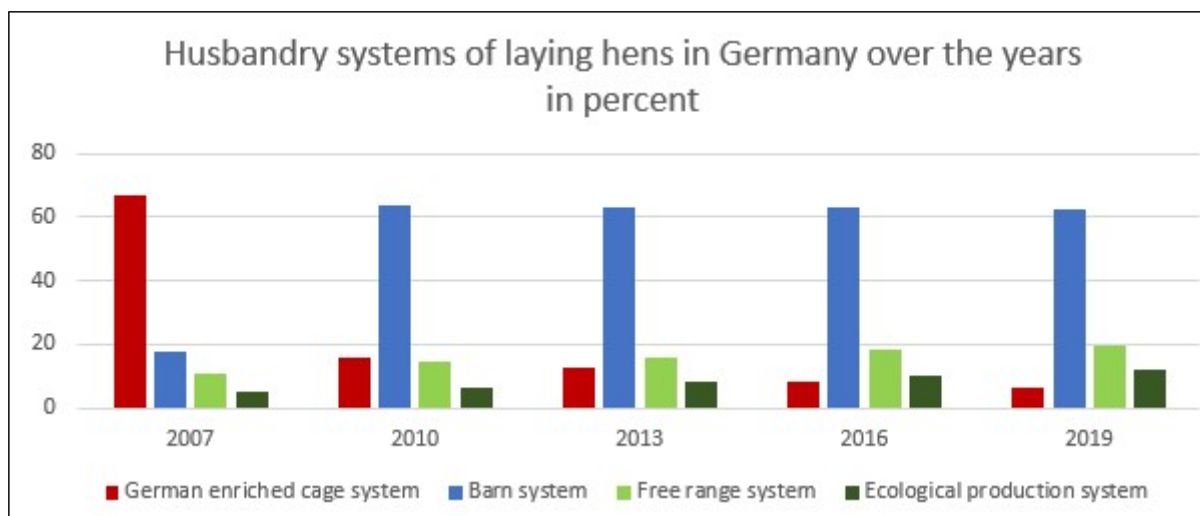
- German Farmers feel they were not well informed about the fact that the alternative housing systems go hand in hand with higher management standards and, therefore, take more time
- The breeding companies failed to provide the right hens at the beginning of the changing process:
 - o The laying hens were too nervous: They had panic attacks too easily, ran into the corner of the stable and squeezed themselves to death (annotation: group size in alternative housings: 6000 laying hens, several groups per house possible)
 - o The laying hens were not agile enough: If the laying nest was far out of reach, the hens laid their eggs on the floor which resulted in food hygiene problems and an increased workload.
- The feed composition needed to be newly developed due to more movement possibilities in alternative housing systems. Feed became a solution for occupying laying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hens and therefore to prevent bad habits like feather pecking and cannibalism.

- Ideas of how to enrich husbandry systems for laying hens in order to prevent feather pecking and cannibalism still had to be developed (e.g.: feeding machines which put grains in litter)
- Pullet rearing systems were not changed at the same time as the laying hen systems. Pullets reared in cage systems or just on the floor were unable to find feed, water and nests in some alternative housings as they were not used to the third dimension. They therefore overwhelmingly laid their eggs on the floor (food hygiene problem, increased workload). In the most extreme cases they died because of food and water deprivation as they did not find the way from the floor to the feed and water in the (high) aviary system.
- German farmers, veterinarians and state agricultural advisors could not benefit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as Germany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switch to alternative systems
- There was no platform where farmers could exchange information and ideas

Over the following years all problems could be solved. New goals have been set: For example, in 2017 beak trimming was forbidden for laying hens. To improve the transition, the German State implemented development, knowledge sharing and best practice sharing platforms for German farmers to learn and to engage with other farmers to share experiences (Model and Demonstration Project (MuD) Animal Welfare). These were highly accepted.



Picture 5: Husbandry systems in Germany over the years in percent²

Cage system	Floor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st efficient method of poultry keeping - Birds are limited in their natural behaviour (animal welfare) + Less labour-intensive + Better hygiene (diseases including parasites spread more slowly) + Climate easier to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n something goes wrong the consequences are more serious - Higher management level necessary: behaviour is an extra factor to take into account + Birds can display their natural behaviour + Better image (meeting demands of society) - More labour-intensive: a lot of extra work in the poultry house +/- Ventilation systems work differently in floor systems (fewer chickens, so less heat is generated, susceptible to weather influence, reduced pressure ventilation not possible in free-range system)

Table 1: Differences between husbandry systems¹

Sources:

¹Layer Signals, a practical guide to layer focused management, Monique Bestman et al., Roodbont agricultural Publishers B.V., 2013, ISBN 978-90-8740-124-5

²<https://www.landwirtschaft.de/landwirtschaft-verstehen/wie-arbeiten-tierhalter/besuch-bei-der-legehennenhalterin>

Author:



Dr. med. vet. Nicola Hirsch
 Veterinarian with a special focus on animal hygiene/ husbandry and poultry
 Bavarian Animal Health Service
 Senator-Gerauer-Str. 23
 85586 Poing, Germany
nicola.hirsch@tgd-bayern.de
 0049-89-9091227

Fundi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ree State of Bavaria and the Bavarian Joint Founding Scheme for the Control and Eradication of contagious Livestock Diseases (Bayerische Tierseuchenkasse).

Acknowledgments:

I thank Shakeel Adam, Ulrich Hirsch and Dr. Ferdinand Schmitt for their support.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토론 01.

축산법 시행령 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산란계농장의 현실과 입장

최종건 A형 농가 농장주



축산법 시행령 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산란계농장의 현실과 입장

최종건 A형 농가 농장주

01. 전국 산란계 가구수 및 마리수

[표-1]

연도	산란계	
	가구수	마리수
2006	1,934	57,238,282
2007	1,831	56,093,408
2008	1,711	59,167,945
2009	1,687	62,966,992
2010	1,535	61,691,192
2011	1,441	62,424,649
2012	1,295	61,344,004
2013	1,221	64,824,106
2014	1,170	67,674,077
2015	1,149	71,876,611
2016	1,060	71,042,571
2017	1,089	72,709,514
2018	1,007	74,740,954
2019	963	72,700,835
2020	936	72,579,554
2021	946	72,612,231

[자료출처-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06년 1,934개 이던 전국산란계 농장수가 매년 감소하여 2021년 946농가로 2006년 대비 15년간 약 988농장(51%)이 폐업을 하는 등 산란계업을 떠나며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가수보다 폐업한 농가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2006년 약 5723만수 수준이던 사육수수는 2021년 약 26.8%증가하여 7261만수가 되었습니다.

02. 사육규모별 농장수 및 마리수

[표-2]

년도	10,000 미만		10,000~30,000		30,000~50,000		50,000 이상	
	가구수	마리수	가구수	마리수	가구수	마리수	가구수	마리수
2006	550	3,806,048	820	14,408,713	305	11,279,325	259	27,744,196
2007	497	3,420,741	790	13,947,642	287	10,580,267	257	28,144,758
2008	380	2,470,752	753	13,406,094	290	10,689,025	288	32,602,074
2009	338	2,134,391	731	13,037,549	296	10,981,542	322	36,813,510
2010	297	1,841,003	642	11,284,689	274	9,943,329	322	38,622,171
2011	257	1,629,276	610	11,131,818	247	8,914,221	327	40,749,334
2012	236	1,440,060	513	9,260,639	224	8,099,106	322	42,544,199
2013	222	1,352,506	433	7,894,366	221	8,093,369	345	47,483,865
2014	192	1,165,265	403	7,245,910	199	7,343,072	376	51,919,830
2015	188	1,173,181	352	6,332,329	208	7,659,831	401	56,711,270
2016	166	972,753	316	5,684,679	186	6,922,436	392	57,462,703
2017	170	1,090,490	345	6,253,673	167	6,225,508	407	59,139,843
2018	148	913,693	285	5,052,109	144	5,599,917	430	63,175,235
2019	144	897,389	236	4,286,803	159	6,210,779	424	61,305,864
2020	161	1,041,000	228	4,166,877	137	5,291,858	410	62,079,819
2021	147	952,628	229	4,156,943	141	5,433,672	429	62,068,988

A형 개방축사로 추정되는 5만수 미만의 소규모농장의 가구수는 2006년 1,934농가중 1,675농가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사육마리수는 전체 5723만수중 2950만수로 전체의 5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8년 한미FTA체결로 인한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에 시장에 풀리며 직립형 무창계사로 전환되는 중이고 5만수 미만의 A형 개방계사 농가수는 2006년 1,675농가에서 2021년 517농가로 70% 가까이 감소하여 2021년 전체사육농가(946농가)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육마리수는 2006년 2950만수에서 약75% 감소한 1054만 마리로 2021년 전체 사육마리수(약 7260만수)의 14.5%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259농가이던 전체의 14% 수준이던 5만수이상 농가는 2021년 429농가로 증가하였으며 사육마리수는 45% 증가하였습니다. 5만수이상 농가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의 농가는 A형 개방축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만수 미만의 소규모 농장가구수의 감소는 1세대 농장주의 고령화와 계승할 2세 후계농의 부재, 축산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으로 인한 신규축사 허가의 어려움, 정채된 계란가

격과 생산비 상승에 의한 부채증가 등의 경영악화, 현실성 없는 시설처분 보상금 삭감, 선별포장업 등 각종 신설된 규제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3. 축산법 시행령 개정

2018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개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설계되고 건축된 기존농장까지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축산법 시행령 개정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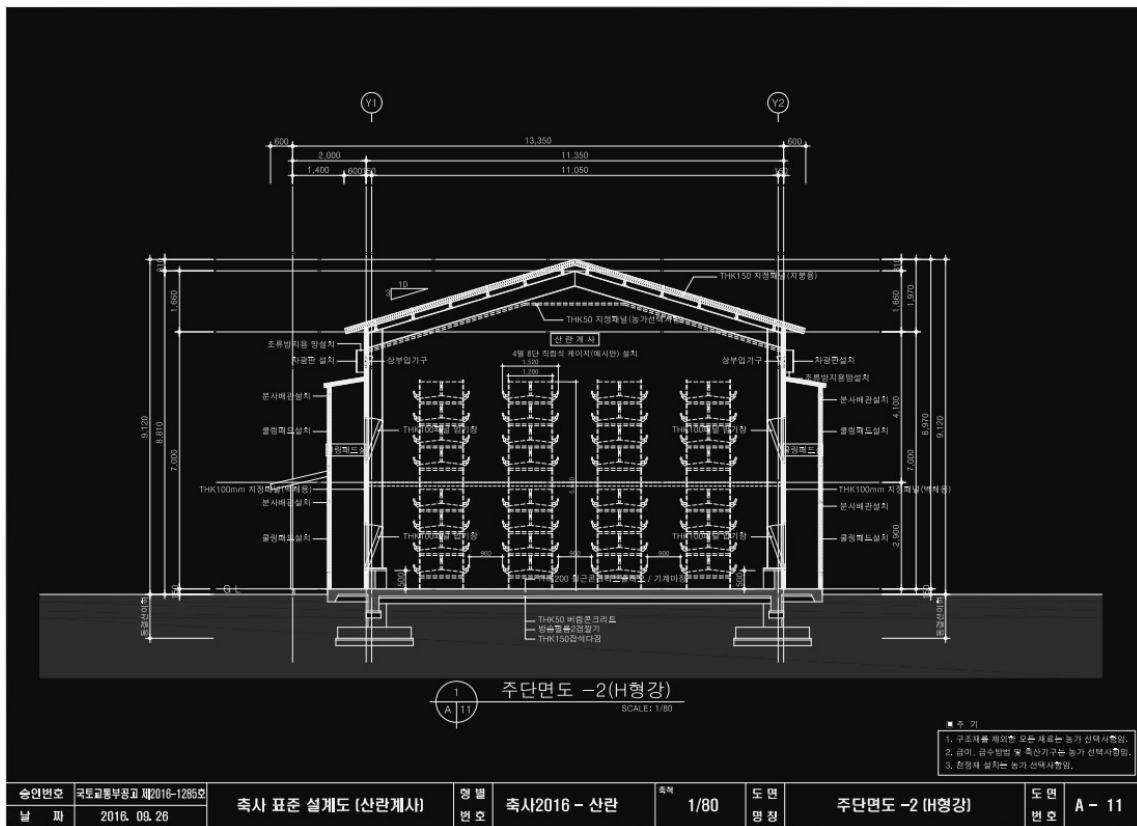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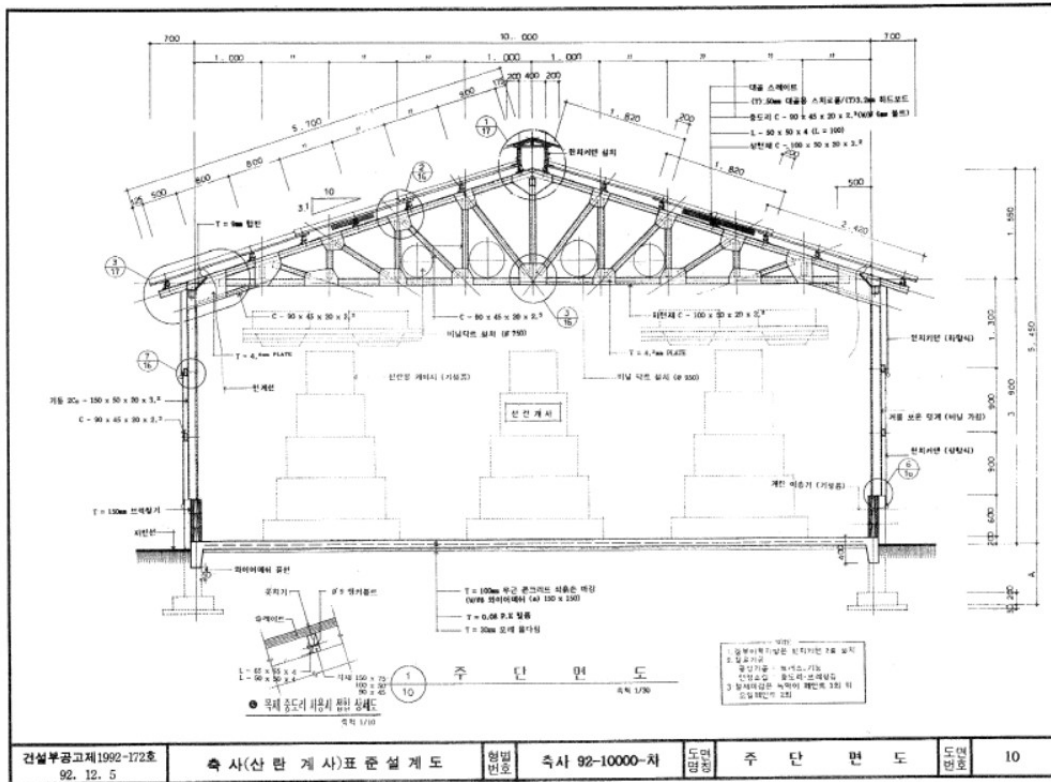
2016년 12월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던 시기에 동물단체는 밀집사육이 AI의 원인이라 주장하였고, 언론은 동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 하였습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야생에서 발생한 AI바이러스가 철새의 분변(수직전파)이나 AI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이나 물품이 농장 내 유입되어 사육중인 닭이 접촉(수평전파) 했을 때 발병하는 것이지 농장에서 사육중인 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1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과 최명철 과장(044-201-2311), 이재승 사무관(2326) / 제공일: 7월 9일(총 5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전하게 소비하는 나라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관리에 효과 기대 -		

<p align="center">《 주 요 내 용 》</p> <p>◆ 「축산법 시행령('18.7.10 공포)」 및 「축산법 시행규칙('18.7.12 공포 예정)」이 개정되어 '18.9.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p> <p>【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계·종계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및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 ○ 법령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미구비 시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 종계·종오리장의 출입로 구분 및 닭·오리 농장에 CCTV 설치 ○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분무용 소독기 등) 추가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위 3가지의 도면은 정부(국토교통부)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당시의 축산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축사 표준 설계도를 제작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한 도면입니다.

표준설계도 제작의 목적은 축사가 일반건축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특수건물로서 동물사육시설의 특성을 모르는 일반설계사에 의한 설계가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국토교통부)가 전문가를 동원하여 설계를 함으로써 축사시설의 과학화에 기여코자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의 추진 과정에서 마리당 0.05㎡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축사가 마리당 0.075㎡로 소급적용 되면 사육마리수의 감소(A형 개방형축사 50%, 직립형 무창축사 30~40%)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표준축사도면을 설계하고 보급한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산란계 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산란계농가의 실태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사육형태별 농가수, 사육수(사육가능한 케이지 케파), 농장주의 연령, 후계농의 여부, 농장의 민원 등의 기초조사가 선행 되어야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한 문장이 산란계농장과 관련산업, 나아가 국가경제와 민생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2) 경영상의 문제

2008년 한미FTA협정으로 축사현대화사업이 시작되어 많은 축산농가들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축사를 헐고 신축 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 비중이 높은 산란계농가는 현대화시설(무창 직립형계사)을 추진한 농가일수록 축산농가 평균 부채금액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 음수시설의 동파와 각종 질병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호흡기 질병으로 사육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개방형 A형 개방축사농장은 폐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 대출, 사료회사의 대여금등의 채권회수가 즉각 이루어질 것이고 개정된 축산업 시행령으로 사육이 불가능한 축사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농장이 경매에 넘겨져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산업인 식품업계, 배합사료회사, 동물약품제약업계, 비료업계, 계란유통업계가 연쇄적으로 파괴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계란자급자조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물가폭등을 일으켜 국민은 고통 속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손실과 역사적인 정책실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3) 법의 안정성 문제(소급입법금지원칙)

대한민국 헌법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제정 이후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급입법을 허용하면 이미 종결된 법률관계가 시간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차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불신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시간적 효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3에 0.042㎡이던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로 상향하여 기존축사에 소급적용하였고, 불과 5년만인 2018년에는 0.075㎡로 상향하여 기존축사에도 소급적용 시키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산란계농장을 운영하거나 산란계농장을 시작하고자하는 국민의 투자를 가로막는 법의 안정성이 결여된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기존축사 농장주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국민이 현재 축산업 허가 기준인 마리당 0.075㎡시설로 축사신축을 고려하여도, 몇 년 후 또 다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축사에 소급적용 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므로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표-2] 50,000수 이상의 농장수가 시행령 개정이후인 2018년 430농가를 정점으로 2021년 429농가로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려면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구)축산법 시행령이 위헌의 소지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령 및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정책수립과정은 신중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변화 하는 것도 반영해야겠지만, 잘못된 정책이 불러올 국내 산란계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의 몰락과 계란 자급자조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전환,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의 하락, 물가에 미칠 부정적 파장도 아울러 염두 해야 합니다.

다른 산업의 예

국토교통부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안전장치 비상차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설치 의무화를 발표하며, 기존 운행중인 자동차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생산·판매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법령에 의해 생산·판매된 자동차를 폐기하거나 새로운 안전장치의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1. 내구연한이 존재하여 세월이 지나면 기존의 자동차는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2. 기존법령에 맞게 설계되어 생산·판매된 자동차에 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3. 구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구매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폐기할 권한이 없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2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  구독

1인당 최소주거면적 확대...12㎡→14㎡로 상향

입력 2011.05.26. 오후 5:18 기사원문

1인당 최소주거면적이 상향 개정되었지만 기존 법령기준으로 건축된 주택을 폐쇄하거나 철거 등의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설치사례와 같을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국민의 보편적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법률로서 국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소급적용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럽과 다른 대한민국 축산의 현실

동물단체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유럽의 축산정책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축산강국인 미국은 여전히 케이지사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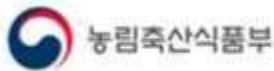
각국의 법과 제도가 다른 이유는 과거 수천년 전부터 정치·경제·언어·종교·철학·기후·지정학적 배경이 달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온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국가의 법과 제도가 완벽했다면 전 세계는 하나의 법과 제도로 이미 통일 되었을 것입니다.

유럽의 사례는 참고사항 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의식과 선택의 문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21.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자료출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21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4)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미구입 이유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이유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이 보다 안전할 것 같아서'가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이 영양, 품질 등이 우수할 것 같아서'(33.8%), '내가 지불한 비용의 일부가 동물복지에 보탬이 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15.3%)의 순으로 나타남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을 찾기 어려워서'가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이 뭔지 몰라서'(29.5%), '일반 축산물보다 비싸서'(21.6%)의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의 구입이유로 '영양, 품질 등이 우수할 것 같아서'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 축산물이 케이지사육 축산물보다 영양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은 ‘그럴 것 같다’는 감성적 접근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을 찾기 어려워서’가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많은 응답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이 원지 몰라서’가 29.5%로 조사되었는데, 정부도 ‘동물복지’가 무슨 뜻인지 정의 내리고 있지 못하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건 어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21.6%가 ‘일반 축산물보다 비싸서’라는 답을 하였는데, 가격이 구매기준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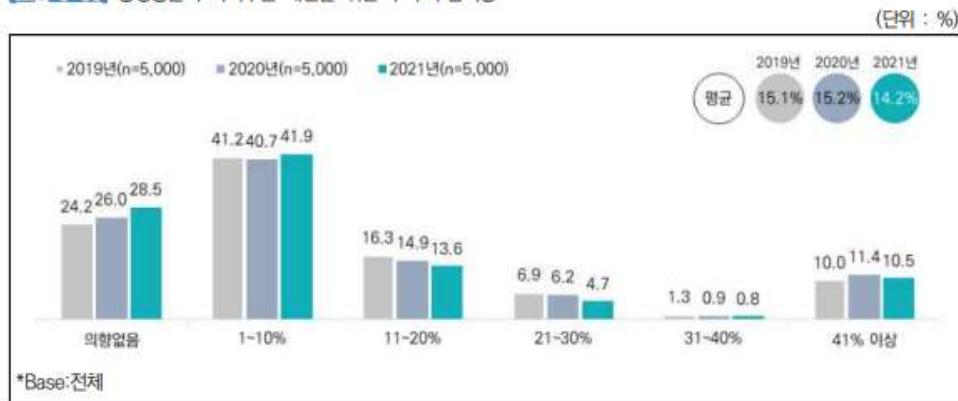
5)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에 대한 인식

-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63.8%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높았고, 2020년 대비 ‘필요하다’는 의견은 0.5%p 증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양육자의 70.0%, 미양육자의 61.6%가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일 필요하다고 응답

6)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추가 부담의향

- 농장동물의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추가 부담의향은 1~10%가 41.9%로 가장 높았고, 추가 부담 ‘의향없음’은 28.5%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축산물 구매비용 100 기준, 추가 부담의향 수준은 평균 14.2%
- 2020년 대비 추가 부담 ‘의향없음’은 2.5%p 증가하였고, 추가 부담의향도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추가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림 3-50 농장동물의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추가 부담의향



소비자들은 농장동물 복지수준의 개선에 대해서 응답자의 63.8%는 공감할 하면서도 이를 위한 추가 부담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구매비용 100을 기준으로 ‘1~10%를 더 부담하겠다.’가 41.9%로 가장 많았고, ‘의향없음’은 28.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가격의 41%이상을 추가부담을 해서라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도 10.5%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동물복지농장이 생산한 계란의 소비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생산비용이 비싼 농장동물복지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가격의 ‘1~10%’ 추가부담의향이 있는 소비자 41.9%와 ‘의향없음’으로 응답한 28.5%를 합한 조사에 응답한 약 70%의 소비자는 추가부담의 의향이 없거나 많아야 10%정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농장 계란가격이 케이지농장의 계란가격 대비 2배에서 많게는 3~4배에 달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저렴하게 복지농장계란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비싼 동물복지농장 계란가격의 현실은 매우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전체의 의식이 아닌 행동이 변화하여 현재가격의 2~4배 비싼 동물복지농장 계란이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케이지사육 계란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계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란은 쌀, 우유와 더불어 100% 자급자족하는 대표적인 축산물로써 45%에 불과한 국내 식량 자급률 환경에서 국민 모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능한 단백질공급원의 역할과 다양한 음식의 식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이 가존축사에 소급적용 되면 저렴한 국내산 계란은 사라지고, 국내 자급자족하던 계란시장을 수입계란이 점령할 것이며,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어떤 축사환경에서, 언제 생산되었을지 모를 수입계란을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하고, 상위 10% 고소득 계층만이 동물복지농장 계란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산업 종사자의 현실

저희 아버님은 지난 40여년을 산란계농장을 운영하신 축산 1세대입니다. 축산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써 법정휴일이 보장된 일반근로자들과 선택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쉴 수 있는 자영

업자와는 달리 살아있는 동물을 케어 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1년 365일 40여년을 쉬는 날도 없이 인생을 바쳐 산란계산업에 키워오셨습니다.

저 역시 20대에 축산업에 뛰어들어 어느덧 40대 두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제 청춘을 바쳤고 대한민국 식량안보에도 이바지한다는 나만의 보람도 느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평생 양계장을 하며 살아갈 계획이었지만,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이 2025년 기존축사에 소급적용 되면 저와 제 가족을 포함한 산란계농가들은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농축산업에서 대를 이을 2세 후계농의 존재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1세대 농장주의 고령화로 인해 후계농이 없는 50%이상의 산란계농장이 이미 폐업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신설되는 과도한 규제로 축산의 꿈을 접은 2세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등 농촌의 인구소멸과 도시집중화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어긋나며, 식량안보와 축산업에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가금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포천채란지부 질의답변

1. 밀집사육(수당 0.05m²)과 면역저하 및 HPAI감염에 대한 상관관계

고병원성인플루엔자 (HPAI)는 매우 감염력이 높고, 특히 닭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건강한 닭에서도 빠른 감염과 임상증상 및 폐사율을 보이는 질병으로, 닭의 면역저하가 직접적으로 감염률을 높이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육밀도를 낮춤으로써 닭의 면역이 개선되고, 질병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 사육밀도 감소 (0.05 m² → 0.075m²)와 겨울철 계사환경유지

닭이 사료를 섭취하고 체온유지를 위해 생산하는 대사열 (metabolic heat) 또한 중요한 열원 (heat source)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닭 한마리가 10watt의 열을 발생하고, 열마리가 있다면 100watt짜리 전구에 해당하는 열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계사가 설계되었을 때보다 적은 수의 닭을 사육하게 되면, 그만큼 총대사 열량이 줄어들게 되고, 적정한 환경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21-23℃), 더 많은 열원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겨울철 생산비(연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적정환경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닭은 저온에 노출되어 체온유지를 위해 더 많은 대사열을 발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료섭취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사료효율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초래합니다. 즉, 산란계 농장의 사육 밀도 감소는 생산개체 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더불어 사육환경관리를 위한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온환경(16~18°C이하)이 지속되면, 닭은 저온 스트레스(Cold stress)에 노출됩니다. 저온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질병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산란율과 난각 품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기존에 설정된 환기량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감소한 입식 수수가 요구하는 환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환기 부족 또는 환기 과다에 의해 호흡기계 질병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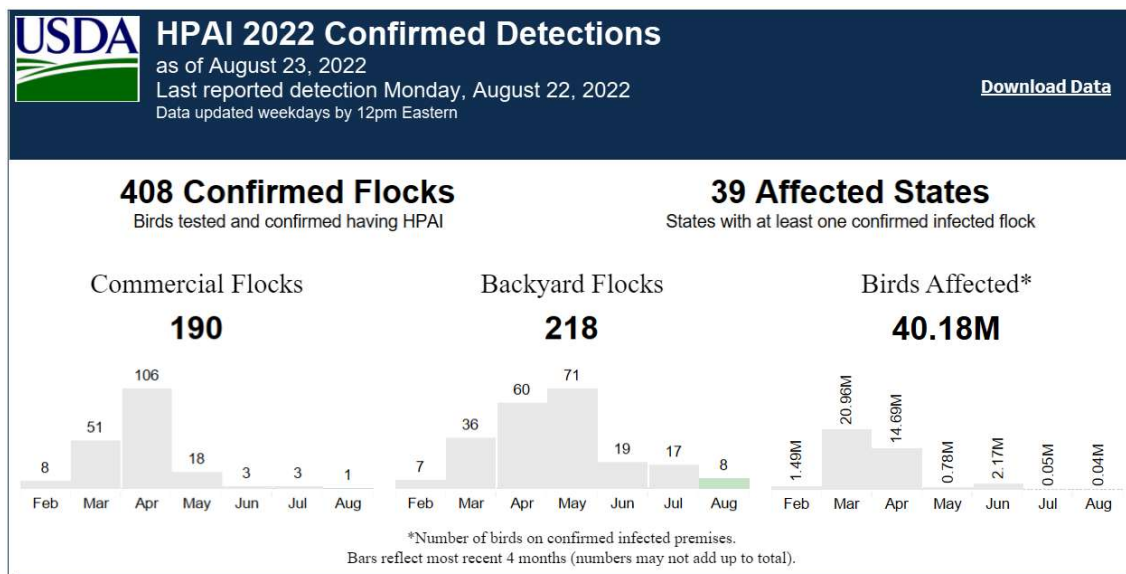
3. 방사형 사육방식과 케이지 사육방식의 HPAI 발생가능성 차이

야생조류는 HPAI의 자연 숙주로서 임상증상이 거의 없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사형 사육환경은 이러한 야생조류와의 접촉이 더욱 유리하여 질병발생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한번 HPAI가 발생하면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사람, 차량, 기구 등의 이동으로 인한 질병전파가 발생합니다. 근접거리라면 매개체 없이 공기전파만으로도 질병이 전파되게 됩니다.

통계상으로 케이지 사육방식의 계사에서 HPAI질병발생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양계농장들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많은 농장들이 농장간 방역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방사형농장에 비해 절대적 농장수 및 사육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표는 2021-22년 미국에서 발생한 HPAI 농장수 집계자료이며, 방사형농장(Backyard flock)의 발생비율이 일반 산업형농장보다 높으며, 2022년 5월 이후로도 꾸준히 발생하여 질병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토론 02.

동물복지사육에 대한 업계의 입장

안두영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동물복지사육에 대한 업계의 입장

안두영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1. 사육밀도 확대의 배경

- 가. 농식품부는 2016년에 고병원성AI로 0.05㎡/수 → 0.055로 확대코자 하였으나, 국내 사육 여건과 맞지 않는 무분별한 유럽형 사육면적 도입과 산업형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 적용 문제, 계란 가격상승과 산란산업의 국가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 발생으로 0.05㎡/수 유지키로 하였음
- 나. 2017년 계란 내 살충제 잔류파동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이 살충제의 해법이라는 여론이 조성되어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아래 [별표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과 같은 사육밀도 규정 신설
- 다. 가금관련 학계 및 수의사는 밀집사육이 고병원성AI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발표하였고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형 농장에서도 AI 및 진드기 피해가 커 살충제 잔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밀집사육은 아니라고 판단

■ 축산법시행령 제14조의2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 · 산란계	케이지 (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0.075㎡/마리	
	평사	9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 (2) 시설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케이지 한 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 (3)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 (4) 종계·산란계의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2. 사육면적 증가(0.05㎡/수 ⇒ 0.075㎡/수)에 관한 업계의견

가. 계란 공급 감소로 인한 문제점

- 1) HPAI 발생 전 평년(2018년~2020년) 연평균 소비자가격(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5,338원(특란30구 기준)
- 2) 고병원성AI로 30%살처분 이후 2021년도 2월~7월 전국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 7,506원(특란30구 기준) 평년기준 40.6%인상
- 3) 2021년 이전 3년평균(평년)기준 산란성계 적정 사육수수(통계청「가축동향」) : 5천3백만 수
- 4) 5천3백만수를 사육기준으로 연간 계란 생산 수를 추정할 경우
 - 0.05㎡/수 : 15,900,000천개 생산
 - 0.075㎡/수를 적용할 경우 사육수가 30% 감소하여 연간 4,770,000천개 부족
 - 4,770,000천개/365일 = 13,000,000개/일 정도 부족분 발생
- 5) 실제로 2020~21년 AI발생 상황에서 계란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혼란.
- 6) 2021년 수입란 실태조사

계란 가공품 수입통관 실적

단위 :천달러, 톤,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증감율	
					전년대비	평년대비
총수입	금액	176,248	60,839	30,852	189.7	471.3
	수입량	36,735	9,288	3,705	295.5	891.5
조란 (신선)	금액	90,128	3,250	2,697	2,673.2	3,241.4
	수입량	24,667	528	498	4,571.8	4,853.2

평년 : 2015~2019년도 중 최소,최대 제외 평균치 (자료출처:관세청)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 2,020년도 11월부터 고병원성H5N1발생으로 평년보다 수입증가
- 평년대비 2021년도 총수입량은 8.9배정도 증가함
- 특히 조란의 경우 평년에 비해 485배정도 증가함. 이는 국내 난가가 상승하여 조란으로 수입하여 난황, 난백등의 액란도 수입란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음

나. 적정공급을 위한 사육기반확충의 문제점

- 1) 수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늘릴 경우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사육수수는 현재보다 약 30% 이상 필요
- 2) 계사 신축 및 기존 케이지 철거, 신규 케이지 설치비 증가
- 3) 5천3백만수 사육시 필요한 사육공간
 - 0.05㎡/수 기준 : 약 2,650,000㎡ 공간으로 사육 중.
 - 0.075㎡/수 기준 : 약 3,975,000㎡ 사육 공간 필요
 - 사육밀도 감소시 필요 공간 : $3,975,000\text{㎡} - 2,650,000\text{㎡} = 1,325,000\text{㎡}$
- 4) 사육기반 30% 증설시 예상되는 추가 비용
 - 계사신축비용 : $1,325,000\text{㎡} \times 720\text{천원} / \text{평균} 8\text{단} = \text{약 } 1\text{천}2\text{백}억\text{원}$ - ①
 - 케이지 설치비용 : $15,000\text{천수} \times 15,000\text{원}(\text{수당}) = \text{약 } 2\text{천}2\text{백}5\text{십}억\text{원}$ - ②
 - ① + ② = 3천4백5십억원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산란계 ㎡당 지원단가
- 5) 현재 신규 축사허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난 2016~17년도와 2020~21년 HPAI 시즌에 부족분은 모두 수입으로 대체되었음

3. 동물복지사육에 대한 업계의 의견

- 가. 산란계 농가들도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공감하고 사육밀도를 낮추는 데 대부분 동의함
- 나. 2021년도 양허관세를 체결하고 물류비까지 지원하여 수입을 진행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HPAI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물량 조달의 어려움을 겪었었고 Covid-19 같은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곡물가가 들쭉이고 있는 시점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게 됨
- 다. 따라서 사육밀도의 확대를 위해 한번에 30%정도 공급이 제한되어 물가에 민감한 소비자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공급량이 서서히 줄어 가격변화의 충격이 완화된게 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 정책임
- 라. 재고의 기능을 갖춰 가격이 급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필요 : 냉장저장 기능을 무시한 난

각에 생산일인쇄는 재고를 갖기 힘들

마. 단순히 바닥면적이 아닌 사료를 먹는 공간까지 사육면적에 포함되도록 재해석 필요

바. 사육공간을 마리수로 나누어 소수점 첫째자리가 높은 경우 1마리로 인정(ex:0.075m²/수를 기준으로 해서 5.8마리가 되는 경우 6마리로 해석)

사. 수입계란과의 불평등 규제적용으로 국내산과의 역차별규제 개선 필요

- 1) 2020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계란은 생산일, 농장코드, 사육환경을 난각에 인쇄하도록 법으로 규정
- 2) 수입되는 계란은 포장일, 사육환경만을 난각에 표시함
- 3)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국내산 계란만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산란업계는 도태되고 이에 공급부족분은 사육밀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수입산으로 대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동물복지축산 전환의 의미가 퇴색됨
- 8) 방목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환경과의 갈등이나 특별방역기간(대부분 10월~4월)에 방목을 규제하려는 농식품부 방역당국과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어 동물복지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해야 함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토론 03.

산란계 동물복지축산 현황과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국종인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회장



산란계 동물복지축산 현황과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국중인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회장

1.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 동물복지농장 다수는 규모가 작고 영세. 2022년 8월 현재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206개이며, 평균 1.8개 동에서 9,709마리를 사육 중¹⁾²⁾
- 반면 마리당 사육면적 등으로 생산성은 낮아 가격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음
- 동물자유연대가 2021년 진행한 ‘케이지프리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동물복지달걀에 대해 최대 1.51배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시장가는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물복지란이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정도의 지원 필요
-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것과 같이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해서도 직불금 지급 필요

2. 동물복지축산물 우선구매

- 학교급식의 경우 무항생제 또는 등급란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
- 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급식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동물복지축산물은 공공급식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움
- 동물복지축산물 우선구매제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필요

3. 동물복지 사육환경표시 세분화

- 현재 식용란에 표시되는 사육환경은 평사사육과 다단식(Aviary)이 구분 안 됨
- 각각의 사육방식에 따른 생산성 등의 차이가 큰만큼 이를 사육환경 표시에 있어서도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조정 해야 함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복지축산농장 검색 결과(검색일 : 2022.8.28.)

2) 2022년 7월 현재 전국 산란계 농가는 955개이며, 73,072,967마리를 사육. 가구당 평균 사육수수는 76,516마리로 동물복지 산란계농가의 7.89배에 달함

[사육환경 표시 개선 예]

현재		개선	
사육환경	표시	사육환경	표시
방사사육	1	방사사육	0
평사사육	2	평사사육	1
다단식사육	2	다단식사육	2

4. 동물복지 사육환경번호표시 기준강화

- 사육환경 번호 1번 표시기준이 현재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장주의 편의대로 해석하여 무분별하게 난각에 사육환경 1로 표시해 유통하는 사례 발생. 이러한 농장들을 단속하고자 해도 지자체에서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동물복지 자유방목인증 받은 농가만 사육 환경번호 1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함.
- 사육환경에 대한 잘못된 표시는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동물복지 축산물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육환경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

5. 사육환경 포장재 표시

- 현재 식용란의 사육환경은 난각에 표시. 소비자가 구매전 확인하기 어려움
- 소비자가 사육환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난각이 아닌 포장재에 이를 표시하도록 해야 함. 동시에 사육환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이콘 등의 이미지로 표시하고 ‘자연에서 키운’, ‘방목’ ‘방사’ 등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의 사용은 제한

6. 동물복지축산물 홍보(공익광고)

- 담배는 몸에 해롭다든지, 에너지를 아껴쓰자는 내용의 공익광고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물의 유익함을 국민(소비자)에게 홍보하고 동물복지축산물의 정확한 정보(사육환경표시, 포장재 표시 등) 및 필요성안내 등 동물복지축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홍보가 필요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토론 04.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 적용

이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 적용

이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1. 제도 현황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18.9.1 시행), 가축사육업 허가 시 산란계 케이지에 대한 적정 사육면적 기준³⁾을 강화함

- 신규 허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중, 기존농가는 '25.8.31까지 유예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 1) (사육업 허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 축산업 허가 요건(축산법 제22조제2항)

- ①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 ②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 ③ 가축사육시설 및 방역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것
- ④ 가축사육 규모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 ⑤ 닭·오리 종축업·가축사육업은 고병원성AI 발생 위험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 ⑥ 닭·오리 종축업·가축사육업은 기존 닭·오리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시설 및 방역 시설·장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나. 시설·장비 및 적정사육두수 기준

시설 · 장비	사육시설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소독·방역 시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 것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소	(비육우) 7.0㎡/마리 <330㎡당 47마리>
	돼지	(비육돈) 0.8㎡/마리 <50㎡기준 62마리>
	닭	(산란계-케이지) 0.075㎡/마리, (육계-개방) 자연환기 33kg/㎡

3) (기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0.05㎡/마리 → (변경) 0.075㎡/마리

다. 산란계 케이지 형태



2. 추진계획

당초 계획대로 '25.9월부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농가 지원 및 지도·홍보 강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2) 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구 분	세부 내역
축사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축사시설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예) 급이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소방 시설 등
축산시설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예) 약취 포집 및 저감시설, 인큐베이터, 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등
방역시설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경관개선시설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개선 시설 예)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

○ 농가는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고,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시설 등을 구비

3) 지원액 : '22년 기준 168,783백만원

4)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대출금리 : FTA 기금 1%(중소규모), 이차보전 2%(대규모)

○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상환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토론 05.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최일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수의사무관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최일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수의사무관

1. 제도 현황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12.~)

- (인증제) 농장동물¹⁾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일정 기준 만족 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21년 기준 364농가²⁾)
- 사육시설은 닭의 건강 유지, 생리적 욕구 충족해야 하며, 폐쇄형 케이지(Battery Cage)의 사육은 금지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 (인증신청) 신청인은 인증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최근 3개월간 동물복지 운영실적 포함) 등을 준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

【 인증기준(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고시 별표1-1) 】

- ① 농장 내 일반(관행) 사육 방법 적용 계사 유무
- ② 관리자는 동물복지 및 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 및 절차 마련 여부
- ③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 여부, 질병 치료시 수의사 처방전 유무
- ④ 동물복지 관련 정기교육 이수 및 고용인 교육 내용 전달 여부
- ⑤ 관리자는 경영(사육)관련 자료를 2년 이상 기록 및 보관 여부
- ⑥ 관리자는 닭의 건강 상태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 여부
- ⑦ 관리자는 닭의 질병 및 부상 예방을 위해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여부
- ⑧ 닭의 신체 일부 절단 금지, 부리다듬기는 필요시 부화 후 24시간 이내 실시 여부
- ⑨ 산란 연장 등을 위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준수 여부
- ⑩ 보행장애, 골절, 탈항 등 회복이 곤란하거나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경우 인도적 도태 여부
- ⑪ 사육시설, 사육밀도, 사육환경, 자동화·기계화 설비, 청소 및 소독, 가축분뇨 처리 기준 준수
- ⑫ 실외 방목장 운영 시 1마리당 1.1㎡ 공간 제공, 1,000마리당 8㎡ 차양시설/쉼터 설치, 토양관리 여부

1) 대상축종 확대 : ('12)산란계 → ('13)돼지 → ('14)육계 → ('15)젓소, 한·육우, 염소 → ('16)오리

2) 축종별 현황 : (산란계) 190, (육계) 131, (돼지) 16, (젓소) 26, (한우) 1, (육우·염소·오리) 0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

- (심사결과)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일반기준, 사양관리방법, 사육시설 및 환경, 닭의 상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 부적합 경우 부적합 사유 통지

【 시설·장비 및 적정사육두수 기준 】

시설 · 장비	급이기	(선형) 10cm/마리, (원형) 4cm/마리
	급수기	1개/10마리
	햇대	15cm/마리
	바닥재	바닥의 최소 1/3 이상 깔집 도포
	산란상	(집단) 120마리/m ² , (개별) 1개/7마리
	조명	10룩스(lux)이상 최소 8시간 명기(점등), 최소 6시간 암기(소등)
	환경관리	암모니아 25ppm 이하, 이산화탄소 5,000ppm 이하
사육면적	일반	9마리/m ² 또는 0.11m ² /마리
	자유방목	1.1m ² /마리

【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사육 형태 】



2. 추진계획

전문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인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고도화

* 법 개정 완료('22.4.), 하위법령 마련('23)

※ 소비자 홍보, 농가 컨설팅 등 인증제 활성화 사업('22년 국비 4억)도 지속 추진

- ① 민간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역본부는 인증기관 지정·관리, 교육 운영 등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관리체계 개선
- ②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원재료 함량 기준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인증마크·'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 등 마련
- ③ 동물복지축산 지정 도축장·운송차량³⁾에 대한 시설 기준 마련

3) 법 개정안에 따라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도축장 및 운송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축산물 가공품에 동물복지축산 표시를 할 수 있으며, CCTV 등 시설 기준 要

참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현황

□ 축종별·연도별(누계) 인증현황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인증 농장수(개소)			76	114	145	198	262	297	364
축 종 별	산란계	농장수(개소)	68	89	95	118	144	168	190
		사육규모 (천마리)	845	1,033.5	1,280.5	1,794.7	2,315.9	2,863.3	3,391.1
	육계	농장수(개소)	2	11	30	58	89	97	131
		사육규모 (천마리)	102.2	974.4	2,294.5	4,519.9	6,754.3	7,200.8	9,651
	양돈	농장수(개소)	6	12	12	13	18	19	16
		사육규모 (천마리)	24.9	31.8	34.1	36.1	48.1	51.3	46.2
	젖소	농장수(개소)	-	2	8	9	11	13	26
		사육규모 (마리)	-	152	1,194	1,235	1,412	1,345	3,420
	한우	농장수(개소)	-	-	-	-	-	-	1
		사육규모 (마리)	-	-	-	-	-	-	180

* 한우, 육우, 오리는 인증농장 없음

□ 전체농장 대비 동물복지 농장수 및 사육두수('21) (단위: 호, 마리)

구분		가축사육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
산란계	농장수	941	190	20.2
	사육두수	70,722,059	3,391,117	4.8
육계	농장수	1,514	131	8.7
	사육두수	83,699,105	9,651,017	11.5
양돈	농장수	6,084	16	0.3
	사육두수	11,464,603	46,192	0.4
젖소	농장수	5,256	26	0.5
	사육두수	402,175	3,420	0.9

* 통계청 2021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